

보도시점 2026. 8. 31.(월) 배포 즉시

대지급금 변제금 회수율을 높이는 등 임금채권보장기금 수입 증대로 대지급금 제도는 안정적으로 운영됩니다

1. 관련 기사

- 8.31.(월) 서울경제, ‘2030년이면 1.2조’ 대지급금 고갈 위기

2. 설명 내용

<부담금 요율 인상이 재정 소요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부분 관련>

- 고용노동부는 올해 초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사업주부담금 비율을 상향 조정(보수총액의 0.06%→ 0.09%)하여 재정건전성을 높이하고자 하였음
 - 이에 따른 '26년 7월말(누적) 기준 사업주부담금 수납액은 3,856억원으로, 전년 동기의 2,715억원 대비 1,141억원(+42%) 증가하였음
 - 한편, '27년 정부안에서 추계된 임금채권보장기금 수입 규모는 '26년 9,804억원 대비 1,458억원(+14.9%) 늘어난 1조 1,262억원이며,
 - 이에 따라 여유 적립금 수준도 '26년 3,153억원에서 '27년 5.406억원으로 2,253억원(+71.5%)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
- 또한 최근 체불 감소 기조를 반영할 경우 재정 여건은 더욱 개선될 것으로 전망

<회수율이 담보 상태라는 부분 관련>

- 고용노동부는 두 차례의 「임금채권보장법」 개정을 통해 대지급금 변제금의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해왔음
 - 먼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장기 미회수채권 회수 업무를 위탁하고 변제금 미납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를 제도화하였고('24.8.7. 시행),
 - 최근에는 대지급금 변제금 회수 시 국세채납처분 절차를 준용하면서 도급사업의 직상수급인 및 그 상위 수급인에게도 변제금 지급의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했음('26.5.12. 시행)
- 그 결과 누적 회수율이 반등의 조짐을 보이는 등 회수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상황임
 - * 누적 회수율(%): ('23) 30.9 → ('24) 30.0 → ('25) 29.7 → ('26.7월) 29.9
 - 특히 국세채납처분 절차 도입 이후 압류, 강제집행 등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9월 이후부터는 회수액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
- 한편, 국세청이 추진하는 '국세외수입 통합징수' 개편 시 대지급금 변제금도 포함되도록 적극 협의에 임하는 등 회수율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음

담당 부서	근로기준정책관 퇴직연금복지과	책임자	과 장	남성욱 (044-202-7554)
		담당자	사무관	최다솜 (044-202-7072)

